인센티브 늘리고 투자 촉진 조례…광양시 기업 유치 사활

업체 정착·투자 여건 개선 하고 투자 기업 보조금도 대폭 증액

인센티브 지원 기준 낮추고 고용 500명 1000억까지 지원 가능

광양시가 더 좋은 투자 여건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공장이 들어선 광양 율촌산단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더 좋은 투자 여건을 조성,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시는 민선 8기 시정의 가장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 실현을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주 내용으로 했다.

또 부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투자기업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겼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은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지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 규모와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 기준은 투자금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고용인원 100명에서 200명일 경우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고용인원 200명에서 500명일 경우 최대 500억원, 투자금액 5천억원·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지원하도록 세분화하고 투자 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나,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개월 범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지식정보문화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그동안 유망한 업종임에도 비용의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또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려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시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해수욕장 장기 방치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개장 앞두고 무단 시설 강력 단속

보성군이 다음 달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28일부터 오래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캠핑 시설 단속에 들어간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등 무단 캠핑 시설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달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시설을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했지만, 텐트 등 캠프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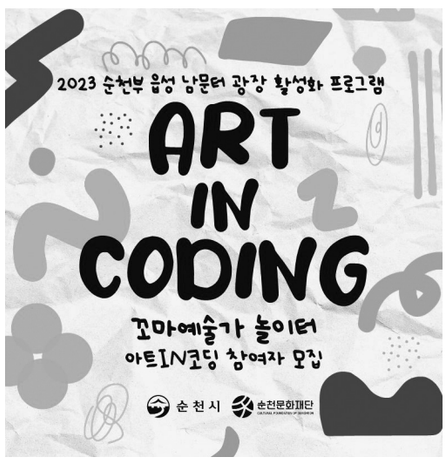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7월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 장비 점검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과 다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무단 시설 설치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순천문화재단 '아트IN코딩' 참여자 8명 모집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순천문화재단이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트IN코딩'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아트IN코딩은 소리, 그림, 문학 등 문화예술을 IT기술로 표현해보는 체험 중심의 융·복합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남문터 광장과 순천 창작예술촌을 비롯해 옥천, 문화의거리 일원의 거점을 활용하는 탐구체험활동이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해 7~10세의 유·초등 저학년 과정, 10~13세의 초등 고학년 과정이 각 2회씩 진행된다.

아동 참여자가 가족과 함께 ICT코딩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은 오는 7월7일까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네이버폼과 전화를 통해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8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7월8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문화놀이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순천문화재단 자원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

12개 품목 도매 가격과 차액 보전

곡성군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12개 품목에 대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해 고시했다.

군은 최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확정된 12개 품목 최저가격을 누리집에 고시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쌀과 고추, 옥수수, 딸기, 멜론, 토란, 잎들깨, 매실, 사과, 배, 감, 한우 12개 품목이다.

심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상품 기준으로 2020년~2022년 3개년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해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으로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다.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곡성군이 결정한 2023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1㎏ 기준)은 쌀 2465원, 건고추 1만7772원, 풋고추 2612원, 옥수수 916원, 딸기 7044원, 멜론 2772원, 토란 1645원, 잎들깨 6889원, 매실 1692원, 사과 2152원, 배 2284원, 감 1788원, 한우(비육우·암 지육 단가) 1만9254원, 한우(비육우·수) 1만9123원, 한우(비육우·거세) 2만120원 등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

여수시 '산후건강관리 사업' 의료기관 모집

30일까지…산모 20만원 지원

여수시가 '산후건강관리 지원' 신규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여수시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 20만원권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지역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단 분만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모두 써야 한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대상 기관은 여수시에 등록된 산부인과와 한의원이다.

오는 30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전자우편(suynn4808@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면 보건소와 2년간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후 산후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진·출입 항로 항행여건 개선

항로표지 순차 점멸시스템 구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광양항 바닷길에 도입한 순차점멸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인근 항로에 항로표지 순차 점멸시스템을 도입해 선박이 더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항행 여건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올해 2차로 순차 점멸시스템을 도입했다.

공항활주로와 비슷한 방식인 이 시스템은 일정한 시간 간격(0.2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점·소등해 선박에서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2차 순차 점멸 시스템 도입은 좌현 표지(녹색 등부표) 6기다. 6개 등화가 동시에 점멸되는 기존 방식에서 순차적 점멸 방식으로 바뀌면 단순히 항로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방향까지 알려주게 돼 뱃길 찾기가 쉬워진다.

여수해수청은 시스템 도입 후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항 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 시인성 개선뿐 아니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담당자는 "대형 선박의 항행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광양항이 동북아 해상물류 중심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접수·상담 창구' 운영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 등 지원

광양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지원 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와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 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상담을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절차 지원과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자체적으로 무료 전문가 법률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다른 지역 주민이다.

이은관 광양시 건축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